

작년 직장인 평균 월급 349만원 '찔끔' 인상...근로 1시간 ↓

증가폭 전년 5.3%보다 약 2%p 감소...“상여금 축소탓”

대기업 노동시간 늘어 단축정책 역행 결과 나오기도

지난해 직장인 평균 월급이 349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4% 소폭 증가했다. 증가율이 작년 5%대에서 3%대로 둔화했다.

근로시간은 업무 가능일 감소 여파로 월 평균 1시간여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늘어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펴낸 ‘2020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9만원으로, 전년대비 3.4%(11만4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총액 증가율이 2018년도

5.3%에서 1.9%포인트(P)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소속을 뜻한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1인당 평균 월급은 313만9000원으로 4.0%(12만원) 증가, 300인 이상은 535만6000원으로 1.0%(5만1000원) 증가를 나타냈다.

이러한 임금 증가 둔화세는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제조 업계 어려움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임금총액

증가율 둔화는 작년 조선업과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금 1년치가 지급된 반면 2018년에는 2년치가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와 1차 금속 제조업 등 2018년에 지급된 비정기 상여금이 작년에는 축소한데 기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들에게 월 평균 가장 많은 임금을 준 산업은 전기기기증기 및 수도사업(650만2000원)이었으며, 그 반대는 속박음식점업(187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근로시간은 전년도와 비교해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

됐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3.1시간으로, 전년대비 0.8시간(-0.5%) 감소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1인당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557시간이다. 1년 만에 9.6시간이 줄었다.

고용부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245일에서 247일로 2일 추가됐음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10시간 가까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월력상 근로일수란 ‘공관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로,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가 가능한 날들을 가리킨다.

대기업에선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외연 상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근로시간은 월 평균 163시간으로 1.1시간(-0.7%) 감소를 나타냈으나, 300인 이상은 164.1시간으로 0.8시간(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78.6시간)이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 산업은 건설업(136.3시간)이었다.

지난 1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3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5000명(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8만9000명(1.9%), 임시일용근로자는 7만7000명(4.5%) 증가했으나, 기타종사는 2만1000명(-1.8%)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4000명, 7.3%), 교육서비스업(3만8000명, 2.5%),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5000명, 4.8%) 순으로 종사자가 늘었다.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3000명, -0.4%), 광업(-1000명, -4.2%) 등이다. 모든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 20%)은 3000명 증가를 나타냈으나, 경북 구미와 경주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종사자 수가 줄어 각각 4000명, 2000명 감소를 기록했다.

반대로 정보서비스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성장한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에서는 종사자 수가 1만4000명, 1만2000명 크게 증가했다.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 ‘튜닝’ 오늘부터 허용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개조(튜닝)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규제도 완화해 다양한 캠핑카 개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

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캠핑카 튜닝 대상이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 등 모든 차종

으로 확대된다.

또 취침시설(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 변환형 소파도 가능)의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된다.

튜닝 캠핑카의 승차정원 확대 제한도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를 감안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한다.

개정안엔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과 수압활개폐 병지, 취침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담겼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가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다만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자가 확인해 인증을 완료하는 자기인증제도에선 차량 내 표기하는 제작시기 기준을 ‘연도’ 표기에서 ‘연월’ 표기로 변경한다.

자기인증표시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계기판의 좌측 부분 등에 표기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돼지 한돈으로 면역력 높이세요”

당 990원에 판매 한다.

농협유통이 ‘삼겹살데이’를 앞두고 우리 축산 농가를 돋기 위해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전 점포에서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국내산 삼겹살을 100g

저가형 카시트, 보호기능 떨어지고 인증도 안받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저가형 카시트는 고정력이 떨어져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탈부착이 가능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포털 검색 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인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가

격은 지난해 10월 28~29일 기준이다.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주의·경고표시, 모델명·제조사명·제조국명 등을 표기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전 제품이 표기하지 않았다.

위험방지표시와 교환시기 등이 명시된 사용 설명서도 없었으며, 설치에 관한 지시사항이나 설치 방법 등도 표기되지 않았다.

13개 제품은 제품 및 판매사이트에 안전인증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2개 제품은 제조국(중국) 인증을 받았다는 이미지만 판매 사이트에 게시했을 뿐 인증번호와

날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조사 대상 중 ‘유치원어린이집 보조카시트 휴대용 카시트’와 ‘휴대용 카시트 보조카시트 st155’ 등 2개 제품을 KC 인증 제품과 차량충돌시험을 통해 비교했을 때, 미인증 제품은 탑승자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험에 사용된 더미의 목이 심하게 꺾이거나 골반 부위의 고정장치가 파손되는 등 착용자가 다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증 제품은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히 고정했다.

이는 우체국 뿐만 아니라 농협, 약국도 마찬가지다. 농협도 마스크 물량 수급 등의 문제로 3월 초쯤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마스크 판매는 당초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다가 하루만에 ‘오프라인 판매’로 바뀌었다.

온라인 판매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1주일에 1회정당 1세트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1세트는 30~50개 정도의 마스크로 구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온라인 우체국쇼핑몰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회원가입’을 거쳐야 한다.



판매 안내문이 척되어 있는 우체국

정부, 우체국 마스크 판매 혼선 자초

아직 물량 확보 못해 3월 2일부터 가능

“27일 오후부터는 약국, 우체국, 동협 등 공적판매처에서 1인당 5마리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이같이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3월 2일부터나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들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판매를 결정하면 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이때 대규모 ‘줄서기’가 연출돼 자칫 우체국이 감염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새벽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우체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과 공급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면에 소재한 우체국에서 3월 2일 오후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정부 발표만 믿고 우체국을 찾는 시민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

주말이 지난 3월 2일부터 마스크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25일 정부 발표 이후 끝내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와 긴급 협상을 시작했지만, 제조와 우체국 배송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심정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판매 시기를 단축하려 했지만 3월 2일 오후나 되어야 마스크 판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체국 뿐만 아니라 농협, 약국도 마찬가지다. 농협도 마스크 물량 수급 등의 문제로 3월 초쯤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는 이후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계정당 물량 제한’을 두고 판매를 시작한다.

실제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설 연휴 중 광주지역 집배원이 16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주우편집중국을 폐쇄하고 해당 집배원 배달 지역 주민들을 집중 관리하는 등 흥역을 겪은 바 있다.

더구나 마스크나 손 소독제가 없어서 오프라인 우체국으로 이를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구매, 손소독제 사용’ 등 위생을 당부하기도 힘든 시점이다.

이에 우체국에서는 판매 직원의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을 독려하면서 안전한 판매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는 이후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계정당 물량 제한’을 두고 판매를 시작한다.

온라인 판매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1주일에 1회정당 1세트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1세트는 30~50개 정도의 마스크로 구성될 예정이다.